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내역

2018. 10. 29. [월]

- ① 백 일 지나도 못 들어가는데...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20% 남아 (P.1)
- ② 들쭉날쭉 지자체마다 다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일원화 방안 필요 (P.5)
- ③ 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후 반년이 지났는데...식약처, 투명교정기 관리 의지 있나 (P.8)
- ④ 장정숙 의원 “제도적 허점 투성인 입원적합성심사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P.15)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정숙의원실 02-784-153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실

보도일시	18.10.27(토)	담당	박가영 비서
------	-------------	----	--------

백 일 지나도 못 들어가는데...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20% 남아 - 정원 여유 있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해 보육수요 충족해야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27일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어린이집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및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4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표 1 참조]

[표 1] [전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자체별 정·현원 현황]

시도	어린이집 수(곳)	정원	현원
강원도	30	2,087	1,720
경기도	137	8,888	7,333
경상남도	29	2,328	1,797
경상북도	22	2,147	1,565
광주광역시	12	841	621
대구광역시	20	1,441	1,002
대전광역시	33	3,543	2,787
부산광역시	22	1,697	1,430
서울특별시	96	8,234	6,401
세종특별자치시	12	2,285	2,093
울산광역시	18	1,389	1,073
인천광역시	41	3,097	2,408
전라남도	20	1,587	1,347
전라북도	12	888	668
제주특별자치도	10	624	536
충청남도	19	1,496	1,277
충청북도	16	1,099	888
계	549	43,671(100%)	34,946(80%)

-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정원 여유가 있음에도 직원 자녀 외의 아

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 한편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 보육시설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 후 입소한 아동의 평균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했다.
- 또 장정숙 의원실 조사 결과 2018년 9월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고 대기일수는 서울특별시가 310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95일로 대기일수가 가장 짧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전국 어린이집 입소대기 평균 대기일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

지역	평균 대기일수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
서울특별시	221일	310일
부산광역시	126일	206일
대구광역시	90일	113일
인천광역시	113일	189일
광주광역시	47일	145일
대전광역시	88일	190일
울산광역시	124일	201일
세종특별자치시	97일	226일
경기도	109일	235일
강원도	93일	166일
충청북도	102일	178일
충청남도	89일	132일
전라북도	60일	109일
전라남도	74일	95일
경상북도	71일	155일
경상남도	73일	136일
제주특별자치도	139일	201일
	106일	176일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및 장정숙 의원실 재가공, 2018년 9월말 기준,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법령상의 미비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보육시설 입소대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끝/

들쭉날쭉 지자체마다 다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일원화 방안 필요

- 지역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아동 지원 동일화 해 생활 안정 가능케 해야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27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해당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이 만 18세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은 총 14,568명, 보호종료아동은 1,187명으로 집계됐다.
-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 및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자립지원금은 1인당 300~500만 원, 학비로는 150~500만 원, 혹은 실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아동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 2] 참조

[표 1]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현황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서울	500	500
부산	500	500
대구	300	300
인천	300	300
광주	500	500
대전	300	300
울산	500	500
세종	500	500
경기	500	500
강원	400	400
충북	500	500
충남	500	500
전북	500	500
전남	500	500
경북	500	500
경남	500	500
제주	500	500

(자료: 보건복지부)

[표 2] 지방자치단체별 학비 지원 현황

	2014			2015			2016			2017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부산	400	400	400	350	350	350	350	350	350	실비	실비	실비
대구	250	-	-	250	-	-	250	250	200	실비	실비	실비
인천	300	300	300	300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광주	-	-	-	-	-	-	-	-	-	-	-	-
대전	실비	-	-	실비	-	-	실비	-	-	실비	-	-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	-	-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
경기	400	-	-	400	-	-	400	-	-	실비	실비	실비
강원	200	200	200	200	200	200	-	-	-	200	200	200
충북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충남	500	500	500	500	500	500	-	-	-	-	-	-
전북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200	200	-	200
전남	100	-	-	100	-	-	150	150	100	150	150	100
경북	-	-	-	200	200	200	200	200	200	실비	실비	실비
경남	-	-	-	-	-	-	-	-	-	-	-	-
제주	300	300	-	300	300	-	300	300	-	300	300	300

*강원 : 대학생학 안정자금으로 200만 원 한도 내 교재비 등으로 사용
(단위: 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의 경우 1인당 최소 5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4개 지자체(대구·인천·대전·강원)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자립지원금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부처가 지자체 대상 대학등록금·장학금 지원 권고를 내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은 없어 지자체별 등록금 지원 규모 역시 상이하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으로, 학비 지원을 받더라도 보호종료아동이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계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어디에서 성인이 되느냐’에 따라 성인으로서 삶의 출발선이 제각기 다른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지원 금액을 일원화 해 보호종료아동 간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 지자체들이 책임지고 지역 아동을 뒷받침해주는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지침 권고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 지원 기준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

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후 반년이 지났는데...

식약처, 투명교정기 관리 의지 있나

- 식약처의 투명교정기 관리 떠넘기기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여전한 뒷북수사

- 장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임.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나누어짐. [표1]
- 문제는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면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는 것.
 -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음.

<장정숙 의원실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

-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임
- △△치과에서 투명교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은 ‘노○○플러스’ 및 ‘노○○’ 2개 제품이며,
 - ‘노○○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닌 치료행위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노○○’ 투명교정기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용 기공물

로써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함.
- 한편, 장정숙 의원이 식약처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남. [표2]
- 또 다른 문제는 식약처의 구분대로면 해당 제품 광고 시 노○○은 치과기공물, 노○○플러스는 의료기기로 비교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노○○플러스’가 ‘노○○’을 업그레이드한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해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방법인 광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됨. [표3]
- 장 의원은 이같이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이 이원화되어 관리된다면 광고 모니터링의 일관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함. 현행법 상 의료기기 전후비교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치과기공물인 투명교정기는 전후광고를 할 수 있고,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는 전후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 이에 장 의원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제조목적, 광고내용 및 표방하는 성능 및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의료기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서라도 식약처가 의지를 갖고 의료기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대법원 2005.3.25.선고 2004도 8706/ 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두10393/ 대법원 2010.4.29.선고 2008도7688 / 대법원 2018.8.1.선고 2015도10388 판결 등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방지대책 마련은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했다"며,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면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이어 "의료기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제인 정부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2013년 제정 이후 단 한차례 개정(2015년)[그림1]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끝/

■참고자료

[표 1]

○ 완제품 인허가 이력

번호	업체명	품목명/ 등급	인증번호/ 인증일자	이력	비고
1	인ㅇㅇㅇㅇ 코리아 유한회사	치과교정장 치용레진/ 2등급	수인08-684호/ (‘08.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08.7.22) · 제조자 변경(‘09.7.23) · 제조의뢰자 변경(‘10.10.27) · 모델명 변경 등(‘11.1.28) · 원재료 변경(‘14.2.26) · 모양 및 구조 변경(‘14.5.15) · 제조자 변경(‘14.5.16) · 사용방법, 사용시주의사항(‘16.4.11) · 저장방법 변경(‘16.5.9) · 양도양수(‘16.10.13) · 모양 및 구조 변경(‘17.7.28) · 제조자 추가(‘17.8.23) · 제조의뢰자 주소 변경(‘17.8.24) · 모양 및 구조 변경(‘18.4.6) · 외형, 성능, 시험규격 변경(‘18.8.31) · 사용방법 및 사용시주의사항 변경(‘18.9.28) 	완제품/ 수입
2	(주)이ㅇㅇㅇ 인터내셔널	치과교정장 치용레진/ 2등급	제인16-4280호/ (‘16.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6.3.30) · 양도양수(‘16.5.18) · 모양 및 구조 변경(‘18.8.23) 	완제품/ 제조/ 수출용
3	(주)이ㅇㅇㅇ 인터내셔널	치과교정장 치용레진/ 2등급	제인16-4512호/ (‘16.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6.6.17) · 양도양수(‘16.10.11) · 원재료 변경(‘17.9.21) · 제품명 추가: eClioooo® -> eClioooo® / NO△△△△△ PLUS(‘18.5.11) · 사용방법 및 사용시주의사항 변경(‘18.10.5) 	완제품/ 제조
4	인ㅇㅇㅇㅇ 코리아 유한회사	치과교정장 치용레진/ 2등급	수인17-4481호/ (‘1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7.8.2) · 제조자 추가(‘17.8.23) · 제조의뢰자 주소 변경(‘17.8.24) · 사용방법 및 사용시주의사항 변경(‘18.9.28) 	완제품/ 수입
5	오ㅇㅇ ㅇㅇㅇㅇ(주)	치과교정장 치용레진/ 2등급	제인18-4423호/ (1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8.6.5) · 사용방법 및 사용시주의사항 변경(‘18.10.5) 	완제품/ 제조

○ 재료 인허가 이력

번호	업체명	품목명/등급	인증번호 /인증일자	이력	비고
1	(주)인ㅇㅇ ㅇㅇ	치과교정 장치용레진/ 2등급	제허10-1233호/ (‘10.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0.11.23) · 제품명 추가(‘15.10.28) · 취하(폐업)(‘18.8.28) 	재료/ 제조
2	오ㅇㅇ ㅇㅇㅇㅇ(치과교정 장치용레진/	수인17-4580호/ (‘17.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17.9.20) 	재료/ 수입

번호	업체명	품목명/등급	인증번호 /인증일자	이력	비고
	주)	2등급			

<출처 : 식약처>

[표2]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건 송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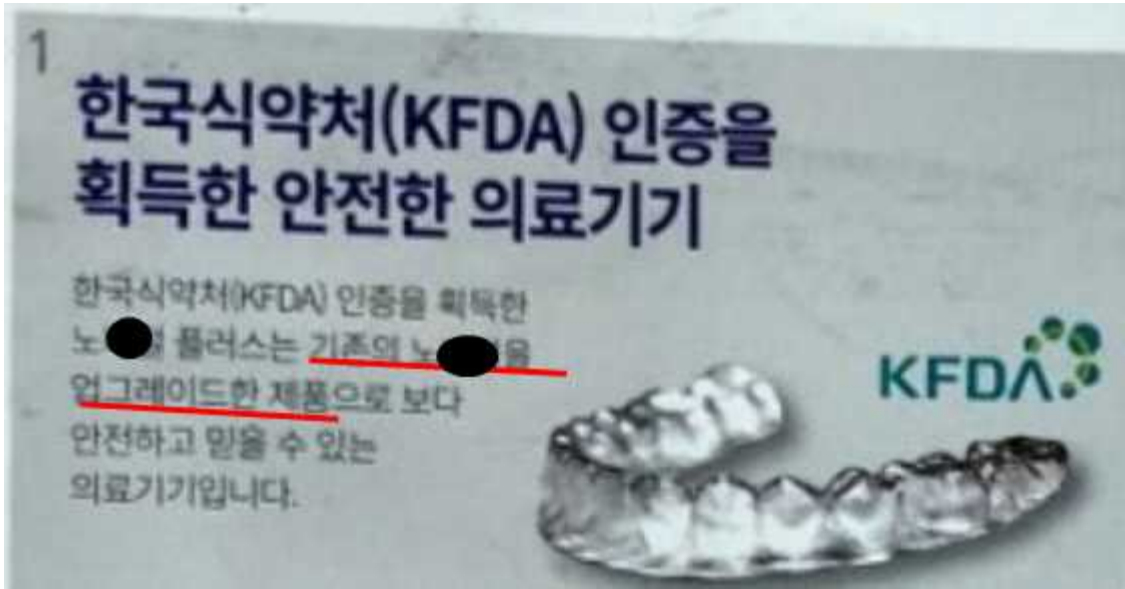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8월까지)
식품 축산물	71	118	227	74
의약품				
의약외품	50	55	43	17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5	32	6	1
의료기기	33	31	6	8
총 수사 건수	159	236	282	95
의료기기 비중(%)	20.7%	13.1%	2%	8%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중 기획수사 건수>

	2015	2016	2017	2018(8월까지)
식품 축산물	11	17	29	13
의약품				
의약외품	2	1	8	2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3	11	0	0
의료기기	0	1	0	0
총 기획수사 건수	16	30	37	15

<출처: 식약처 -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표3] 해당 광고 및 관련 법조항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그림1]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2015.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해설서 개정 이력

-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내용
1	2013. 8.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의 식별 요령을 위한 해설서 마련
2	2015. 7.	다빈도 광고심의 10개 품목 및 질의 응답 추가

장정숙 의원 “제도적 허점 투성인 입원적합성심사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전문의 참석 없이도 이루어지는 입원적합성심사 의결, 전문성 떨어져
-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 미흡 문제, 2차 사회문제 야기시킬 가능성있어

- 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
- 민주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마저도 필수적이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전문,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됨.

제4조(위원의 구성)

-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화를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킨 사례가 있었음.

○ 또한,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번	일시	소위원회명	참석자명단	심사 결정별 건수			
				소계	입원등 유지	퇴원	각하
65	18.08.13	제2소위원회	문OO(시설운영자) 허OO(교수) 김OO(가족 및 당사자)	55	51	0	4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국립부곡병원>

연번	일시	소위원회명	참석자명단	심사 결정별 건수			
				소계	입원등 유지	퇴원	각하
17	18. 7.10.(화) 14:00~17:00	제2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 제6소위원회	박OO(변호사) 박OO(교수) 이OO(환자가족) 나OO(전문요원)	52	41	0	11
27	18. 7.26.(목) 14:00~17:00	제4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 제16소위원회	유OO(교수) 하OO(환자가족) 이OO(전문요원)	58	50	0	8
28	18. 7.30.(월) 14:00~17:00	제1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 제1소위원회	김OO(변호사) 김OO(교수) 김OO(환자가족) 김OO(전문요원)	60	48	0	12
33	18. 8. 7.(화) 14:00~17:00	제2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 제6소위원회	박OO(변호사) 이OO(환자가족) 나OO(전문요원)	60	46	2	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하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퇴원 환자 수 및 퇴원·퇴소 통보 환자 수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퇴원한 환자 수는 115명 (법 시행 이후 3개월 기준, '18.5.30.~8.31.)이며,
-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한 환자 수는 14명 ('18.9.28. 기준)임**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하나, 이렇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도 곳곳에서 제도적 구멍이 보인다면 이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말함. /끝/